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위원장 김진현)

담 당 : 경실련 정치입법팀 T. 02-3673-2141 (서희원 팀장)

제 목 : [성명] 윤대통령 취임 후 여야 첫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총2매)

보도일자 : 2024.04.29.(월)

배포일자 : 2024.04.29.(월)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개최된다. 그동안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되어 이번 회담이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실련>은 이번 회담이 여야 간 지속된 정쟁을 넘어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당은 최근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국정 쇄신과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과 및 시정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중요 직책에 다시 내정하여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제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무총리 인선을 포함한 내각 구성을 야당과 협의하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비판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야당은 정략적 접근을 버리고 양측이 협력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영수회담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정책 협의와 국가적 중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영수회담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야 간 상시적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쟁점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해 나아가야 하며, 선거제도 개혁, 연금개혁, 기후위기 극복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안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길 바란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권이 특정 지지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의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여야가 이러한 협치와 통합 노력을 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4.29.